

공장 300여개 위험물질 취급... '불안한 화약고' 언제까지

여수산단 또 폭발 참사...근본 대책 마련 시급

12월 '3명 화재사망' 이어...대형사고 위험 상존 '불안' 최근 6년새 사고 50건 19명 숨져...산단특별법 제정해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여수산단은 최근 6년새 50건에 이르는 크고작은 폭발·화재 및 안전 사고로 20명에 달한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안전 의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폭발·화재사고만 하더라도 6년 간 30건이 발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여수산단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불과 두달 전인 지난해 12

월 발생했다. 당시 작업 전 잔여화학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등 경찰은 인제(人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산단은 산단 내 300개가 넘는 공장 대부분이 폭발 위험성이 큰 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만큼 폭발 또는 화재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산단 내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실에 따르면 지난 2017

년부터 2021년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만 해도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0건이 발생,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노동자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 노동계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 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여수 시청 앞에서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여천NCC 사고를 비롯,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시 민관 합동 조사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조항 관련 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최고사업주 처벌 ▲산재전문 공공의료기관

설립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원인 조사 시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돼 왔다는 게 노동계 주장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노동자(노동조합)가 사고 원인 조사단에 포함돼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된 만큼 지자체가 이에 대한 후속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교량이나 댐 같은 국가시설물이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수산단 내 시설물은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단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소유한 산단 내 사업주가 시기를 두고 시설물 안전 정밀 진단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위험물을 다루는 여수산단에서는 대형화재나 안전사고가 잦은 만큼 다진 노동자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산업재해 전문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여천 NCC 폭발사고 부상자 일부는 여수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순천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광주로 재이송됐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최관식 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수·정병호 기자·김민석 기자 jusbh@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얼굴 알리자”

정성홍·이정선 출판 기념회 잇따라...이번주 강동완·박혜자 등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지도 경쟁에 나섰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알리고 지지 세력 규합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교조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지난 11일 광주예술고등학교에서 '삶을 바꾸는 광주교육을 그리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정 전 지부장은 36년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경험을 담은 책에서 광주교육의 현안을 진단한 뒤 미래교육을 향한 담대한 전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지부장은 "거듭된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확대됐고,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국가 교육위원회 출범, 고교학점제 도입, 2025개정교육과정 적용 등 국가 교육의 방향도 큰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도 12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저서 '이정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유튜브 '이정선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온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총장은 "2018년 교육감선거 이후 광주시민들

과 함께 나눴던 가슴 따뜻한 교육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이 나아갈 가치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비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는 이번주에도 이어진다.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과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강 전 총장은 오는 19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광주가 학교다 품격있는 실력광주'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알린다.

박 전 의원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공개홀에서 저서 '팬데믹 시대 미래 교육-학교가 문을 닫으니 비로소 학교가 보인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명절 선물' 혐의 양향자 의원 무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55·광주 서구)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과 A씨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상단 부근 석연치 않게 지워졌고 '(의원실) 회관 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됐지만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양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유·초등생 신속검사 키트 21일부터 무료 제공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오는 21일부터 무상 배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

하다고 보고 무상 지원 관련 협의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59만 명, 초등학생 271만 명이다. 학생 1명당 1주에 2개씩 5주분, 총 3300만 개가량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재원 확보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부 조달단가 2420원을 적용하면 3300만개 지원에 총 79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광주 북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올해 2월 8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7일까지다.

북구는 지난 2016년 '광주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해왔다.

특히 아동권리 전담조직 신설과 유니세프 한

국위원회 업무 협약 체결, 아동정착여단 운영, 아동권리 대변인 구성,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실태 조사 아동 영향평가 등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10가지 구성요소를 충실히 이행했다.

또 아동학대 근절과 선제적 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출동과 아동학대 조사, 전문 가정 위탁 지원 및 피해 아동 심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운 한복 입고 전통놀이 12일 광주 동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열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제는 “수목장” 입니다

문종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 수목장 조성 과정

가죽(30평 이하) 수목장

대가장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

062) 464-9190